문 1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농지개발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는 없지만, 무허가토지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문 1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②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 ③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증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한다.
- ④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구조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문 13.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관회의 의결에서 의장인 대법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 ④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문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
-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 ⑤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문 15.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정당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
- ③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 ④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강조되거나 우선되어서는 아니된다.

문 16.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의 친권자 거소지정권 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인 간의 기본권 갈등을 해결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② 현행 헌법상 직접 기본권 행사능력이 헌법에 규정된 예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들 수 있다.
- ③ 민법상의 법인격 인정 여부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다.
- ④ 공법인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부정되지만, 법인은 공법인이 아닌 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7.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면책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②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까지를 포함한다.
- ③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는 그 이행에 있어 입법자는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판단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⑤ 헌법이 명문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도의적·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 18. 국민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인 배심원이 심리에 참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한 범위의 수뢰죄 등이다.
-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평결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문 1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회에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순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의무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그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부진입법부작위의 경우, 즉 법률이 불완전한 경우는 그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문 20.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4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 ② 1954년 헌법과 1960년 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국민투표’의 규정에 대하여 개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결을 전제로 하여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인 반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찬반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④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21.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가 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 또는 기술적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란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약을 말하며,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 ④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명시적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수형자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수형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금지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지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조항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교화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예외 없이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 ④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⑤ 임중격리대상자의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문 23.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위헌결정에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문 24. 국회의 의사 및 표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증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③ 본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④ 국회에서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 ⑤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문 25. 국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②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원원은 제외할 수 있다.
- ④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